

국힘 전현직 女지방의원들, “여가부 폐지 대안제시” 촉구

지방선거 앞두고 당 내 여성의원들 우려 목소리 나와 “민주당, 젠더 문제 선거에 이용... 女표심 부정적 영향”

국민의힘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 1000여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이후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대안 기구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현직 여성 지방의원모임인 '전국 여성지방의원협의회'와 전직여성지방의원모임인 '전국여성정의회'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여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성평등 대책이 없는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공공연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같은 메시지가

집단적으로 수면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300여명, 전국여성정의회는 7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인 박순자 의정부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의 동력은 지선승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비위 사건에 집중하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만드는 등 중립성 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인수위가 대안 없이 여가부 폐지만을 주장한다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젠더 문제를 지선에 이용하려는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한다”며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표심이 향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에 “엄마만 있고 여성은 없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여성정의회 공동대표인 조양민 전 경기도의원은 “대선 기간 당선인은 아동·가족·인구 감소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인수위는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 더욱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대안 기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이에 양성평등미래부를 제안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시절) 제안한 양성평등가족부도 좋다”며 구체적인 부처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인수위는 젠더 갈등 해소, 여성 인권



강화,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저출생 문제 해결, 성인지 교육 강화, 초고령 사회 대책 등 여러 의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대안 부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오로지 정권교체만 열망했고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끝을 염원하는 총정에 귀 기울일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이낙연, 6월 중순 미국 출국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으로

예정대로 지방선거 뒤 미국행...서울시장 차출설 선 국기



이후 이 전 대표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평소 관심을 가졌던 남북관계와 외교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한인사회 등과 교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이후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지만,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인물난 속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호출되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 당내 거물급 인사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 전 대표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지난해 대선 경선 이후부터 구상해온 미국행을 예정대로 떠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장 차출설에 대해선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당 상임고문으로서 이번 지방선거를 뛰는 후보들을 위해 유세 동행 등 측면 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최이슬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차출 대상에 오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계획된 일정대로 6월 지방선거 뒤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 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지방선거를 마친 뒤인 오는 6월 중순께 미국 워싱턴 D.C로 떠난다.

장제원 “MB사면은 대통령 결단 사항...조율 사항 아냐”

“우리가 제안 해도 대통령이 받으면 받는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 만찬회 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 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 “사면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조율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가 제안을 해도 대통령이 받으면 받는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라며 “사면이 서로의 갈등 요소라 회동 테이블 자리에 (이야기를) 안 올리게 아니다. 대통령께서 사면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하시는거기 때문에 안 올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테이블에 올렸을 때 어떤 갈등이 될 거 같아서 안 올린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비서실장은 거듭 “사면은 조율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며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이) 보면 해당 분들에 대해 하는 거고 저희가 집권해서 사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조율을 하면) 그거야말로 사면을 놓고 밀실에서 대화하는게 아니냐. 그게 더 안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속도가 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나 합참에 공무원들이 개설 거 아니냐”며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협조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지 않는 한 자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하면 국방부에서 실무적이고 세밀한 레이아웃이 나올거고 그래야 이전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예산을 갖고 일정부분 협조를 하겠다는 거니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오 되는지 이게 (의구심이) 있었을 건데 현직 대통령께서 허락을 하셨으니 이제 1층은 어디로 2층은 어디로 옮기는지 이런 게(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집무실 이전이 취임식(5월 10일)전까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실무자나 기술자가 아니라 예측할 순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문 대통령께서) 이전 지역에 대한 결정은 어쨌든 차기 정부의 몫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결정은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공백 우려’에 대해 “저희 대선 캠프에 군 출신 참모 100명이 넘게 있었다”며 “저희는 나름대로 안보공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니 그 걱정을 잘 검토, 검증해서 물 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찌 헤아릴 때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하셨다”며 “추가회동은 장담은 못하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소통하고 인수인계를 잘 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어찌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에 대해 이야기는 없었지만 (대통령과 당선인께서) 추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이철희 수석 쪽에서 실무적으로 잘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며 “저희들은 추경을 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보상해 아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우리가 집권전에 (추경을) 할 수 있을지는 이철희 수석과 이야기를 해 나가고 보겠다”고 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